

# 이재명, 민생 앞세워 거침없는 '우클릭'

### 박정희·전두환 일부 성과 언급 보수층 겨냥 행보 잇따라 민주당내 노선갈등 비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성과'를 언급하는 등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대위 조직개편을 마친 뒤 일성으로 "국민만 보고 신속히 전진하겠다"며 이같은 실용행보를 예고했다.

민생을 앞세운 우클릭 행보는 지난 주말부터 3박 4일 간 이어온 TK(대구·경북) 일지에서 유독 두드러졌다. 부동산·일자리에너지 등 민감한 이슈마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가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직격탄을 가했다.

아울러 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 보수의 심장부인 TK 지역정서를 자극했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시장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정치권에서는 고소득 다주택자들이 포진한 보수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 후보가 갖고 있던 유연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추후 강원과 제주 일정에서도 탄력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우클릭 광폭 행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지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조한 대목이었다. 이 후보는 TK 방문 이틀째인 지난 11일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三低)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했고 이튿날에는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다.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과도한 '우클릭' 탓에 이 후보는 물론 당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놓고는 당내 노선 갈등의 조짐조차 엿보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나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는 자당 대선후보의 공개적 제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러부러 나섰지만,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서서히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진 의원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 성과' 언급에도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법

안을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며 "하지만 어제 후보가 의견을 찾기에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와 협의를 하겠다.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석열선대위, 조직도 정책도 난립 조짐

### 김종인 조기 공개 경고장

국민의힘 선대위 일부 역할과 기능이 겹치는 산하 조직이 늘고, 내부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여서 풀릴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파트가 특히 중복이 심한 분야로 꼽힌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책을 개발해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겹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후보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자신이 요구해 관철한 듯했던 실무 중심의 선대위가 통상의 매머드형 조직으로 변질해가는 흐름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난립'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까운 예로, 선대위 코로나위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공공병원의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을 주장했는데, 오후 들어 다시 정책총괄본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전면적인 병상 전환'을 촉구했다. 두 군데서 같은 정책을 조율 없이 시차를 두고 발표한 셈이다.

앞서 후보 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기로 했다가 정책총괄본부와 겹친다는 우려가 있어 명칭을 정부실로 변경하는 등 조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출범한 조직만 봐도 '육상육' 구조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의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와 조직총괄본부 산하 청년본부는 활동 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14일 출범하는 윤희숙 전 의원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비슷한 컨셉트를 내세운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새시대준비위원회와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의 동서화합미래특별위원회 역시 호남 지지층을 겨냥하는 점이 겹친

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부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 눈에 들기 위한 어깨싸움이 과열 조짐"이라며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보이스' 메시지와 정책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부서들이 협의하는 형태로 전체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대위 내 활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선대위라는 조직은 겹치는 것보다 구멍이 문제"라며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야 구멍이 안 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심상정 "취준생·제대군인에 70만원씩 지급"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비우치를 확대해 코로나19 대응 시기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군인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코로나가 강타한 2020~2022년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에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

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전체 실업률은 3~4%인데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상승했다"라며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코로나 불황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심상정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졸업 및 제대 후 5년 이내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전주혜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기간 연장 법안' 통과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13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의 '광주형 일자리'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한 '광주형 일자리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 연말 만료 예정

이던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연간 환급한도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인 경차 취득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감면한도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보라미 도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관행 잡아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최근 도의회에서 "농협이 최대주주로 있는 여수 남해화학에서 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태가 또 벌어졌다"며 "전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 지위 유지 여부 등을 포함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잘못된 경영 태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최근 집단해고 됐다. 남해화학 노동자 집단해고는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서 3번째"라며 "2년마다 반복되는 집

단해고 원인은 하청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는 데다 2017년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 지위 유지 여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gt; 9억 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gt;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gt;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gt;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gt;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gt;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gt;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gt; 4억2천 (1/12)</p> <p>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gt;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gt;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gt;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gt; 2억9천 (1/5)</p> <p>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gt;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gt; 13억 (1/13)</p> <p>062-382-5500</p>